

“코로나19 을 겨울 2차 대유행 가능”

정은경 “면역 과정·지속력 몰라... 장기전으로 전망” “총선투표로 인한 영향은 2~3주 이상 모니터링해야”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단기간에 종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코로나19 유행이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다가 오는 겨울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

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진행되고 전파력도 높아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이 금방 종식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감염된 이후 면역 형성 과정,

면역 지속 등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어서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방역당국)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보고 이에 따른 엄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의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역 형성이나 유행 진행 과정을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1년 혹은 몇 년간, 장기간 계속 유행이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방역당국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을 통해 부활절과 총선 투표(15일) 등 대규모 사회적 이동 및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투표, 인구 이동으로 인한 영향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복기 2주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2~3주 이상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긴장을 놓지 않고 감시와 조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이’도 국회 입성 국회가 20일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향후 차기 21대 국회의장이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중요”

정부 2차 추경 시정연설서 “추경안 조속한 처리 부탁”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

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지금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

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와 고용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내달 7일 ‘180석 여당’ 첫 원내대표 뽑는다

총회서 선출...163명 투표권 10여명 후보군 출마여부 고심

21대 국회에서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 첫 원내 사령탑이 다음 달 7일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중에 원내대표 경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15 총선 이후 첫 경선인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 총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거권은 현재 민주당 소속인 163명의 당선인에게만 있다.

그러나 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례 정당으로 향후 통합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17명)도 함께 이끌게 돼 사실상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재 10여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친문(친문재인) 종진 의원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 압승의 배경이라는 점에서도, 친문 인사로는 이번에 4선 고지에 오른(이하 21대 국회 기준 선수) 김태연 의원과 3선 전혜철 의원이 물밑에서 이미 뛰고 있다.

친문 인사 중에는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윤호중(4선) 사무총장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문 가운데서는 조정식(5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지난해 경선에 도전했던 노웅래(4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안규백(4선) 국회 국방위원장, 박홍근·박완주·윤관석(이상 3선) 의원 등도 도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길 못찾는 미래통합당, 수습 방안 결론 못내

20일 의원총회서 비대위냐 조기 전대냐 주장 엇갈려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전후로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여부 등 당의 진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에서는 비대위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서 당 진로 결정에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해 총선 후유증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후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치되는 모양새다.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연찬회 또는 대토론회 형태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하나로 합일이 되지는 않았다”며 “(참석인원이) 과반은 넘었지만 압도적인 상황도 아니고, 당의 진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여서 모든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여,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고수

금액 축소 등 여러 방안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치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연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간 입장차를 공식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도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는 선에서 사실상 수용으로 분위기가 잡힌 만큼 통합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우선 높이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나선 만큼 이를 고리로 여야 합의를 도출, 정부를 설득하는 형식을 취해 증액을 관철하는 전략인 셈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총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며 한 목소리로 통합당을 몰아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

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야 압박과 함께 당정간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도 찾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에 대해 “서로 대립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100만원으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8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 전국민 지급 후 소득 상위 30% 대상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액수 축소에 대해 “당내에서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아직 협의한 건 없다”며 “여야 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액수 조정 등을 거처더라도 당정간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제21대 국회의원(제주시을)

오 영 훈 (16회)

제21대 국회의원(서귀포시)

위 성 곤 (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동홍동)

김 대 진 (18회)

제21대 국회의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현 치 남 외 회원 일동